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132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987,4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7,4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사 김종신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4층 각 330.12㎡ 5층 275.10㎡

지하 330.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 대13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 호 철근콘크리트조 48.91㎡ 지하 11.3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320분의 45.51㎡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의 C [] , 전라북도 김제시 D [] E 호([])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F [](주)는 2015. 3. 4. 위 C []에게 금 2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7. 10. 5.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 []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F [](주)는 2015. 12. 9. 소의 G [] 주식회사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G [](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위 C 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57400), 2020. 2. 19.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 은 원고에게 금 6,987,416원 및 그 중 금 1,956,008원에 대하여 2022.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 의 아버지는 소의 H 이었는데, 위 H 은 2007. 12. 31. 사망하였고, 위 C 은 위 H 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H 의 상속인들 및 C 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7. 12. 29.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는 2022. 5. 4. 위 부동산을 소의 I 에게 금 6,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같은 해 7. 4. I 에게 위 매매금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례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든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위
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례행위 이후 소외 []
[I]에게 대각되었는 바(갑 제5호증 참조),

본 사안은 사례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
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2. 8. 2.까지 원리금
채권액인 금 6,987,416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례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H은 2007. 12.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J, K, B(피고), L, C(채무자)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9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자매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1/5 입니다.

나. 위 H은 2007. 12.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17. 12. 28.인 바(갑 제9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위 2017. 12.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1/5 지분은 채무자인 C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9호증 참조).

2. 채무자 C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10. 12.자 회신에 의하면, C은 2016. 12.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17. 12. 28.)를 거쳐 조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M 의 2022. 10. 13.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C 는 위 사해행위 당시

- ① N 카드에 금 994,000원(2015. 8. 27. 연체 등록, 2022. 8. 27. 연체 해제),
 - ② O 카드에 금 740,000원(2015. 8. 3. 연체 등록, 2022. 8. 3. 연체 해제),
 - ③ P 에 금 4,300,000원(2015. 8. 7. 연체 등록, 2022. 8. 7. 연체 해제),
 - ④ Q 에 금 2,997,000원(2015. 5. 14. 연체 등록, 2022. 5. 14. 연체 해제),
 - ⑤ R 에 금 9,900,000원(2015. 12. 28. 연체 등록),
-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1쪽 참조]
- [사해행위(2017. 12. 28.) 이전 연체가 발생하여, 사해행위 이후 연체가 해제된 채무들입니다]
- [위 연체해제는 C 이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연체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M 에서는 연체 등록 후 7년이 경과하면 연체상태를 해제처리하고 있는 바, 위 내역을 살펴보면 연체 등록 후 정확히 7년이 경과한 때에 연체가 해제처리 되었습니다]

- ⑥ 원고에 금 1,965,008원(원금 기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임)

등 합계 20,896,00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

위한 '원금'만에 대한 것으로,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C]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이미 밝혔듯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후** 소외 [I]에게 매각되었는 바, 본 사안은 사해행위위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000,000원입니다(피고가 2022. 5. 4. 소외 [I]에게 매각한 매매대금, 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6,000만 원)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12,000,000원(6,000만 원 × 1/5)이 위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12,0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6,987,416원, 갑 4 채권제산서) 중 더 적은 금액인 6,987,41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8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9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2. 10. 21.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귀중

